

# 수능 앞두고 ‘AI 안경’ 비상… 현장 감독만으로 역부족

논술고사서 AI 안경 적발 잇따라  
교육부·평가원, 지침·제재 마련  
단순 소지만으로도 수능 무효 처리  
교사 노조, 감독 교사 보호대책 요구

대입 논술고사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 감독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 당국이 AI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고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현장 감독만으로 신중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사 노조도 감독관에게 추가 업무를 맡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시립대 자연계열 논술고사와 10일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논술고사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됐다. 시험 전 확인 과정에서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 도중 안경을 바꿔 쓴 정황도 드러났다.

AI 안경은 카메라와 통신 기능 등을 활용해 촬영한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A



AI에 의해 생성된 시험장과 스마트 안경 이미지.

I가 분석한 답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일반 안경과 형태가 비슷해 외관만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교육 당국은 제재 기준과 현장 대응 지침을 정비했다.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안경을 직접 착용하며 신중 기기가 시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연도뿐 아니라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14일 교육위 국감에서 시도교육청 차원의 스마트 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AI 안경을 명시하고, 감독관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 책자와 식별 안내자료, 교육용 동영상도 제작했다. 스마트 렌즈 등으로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기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15일 공개한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스마트 안경 관련 제재와 감독관의 확인 절차가 담겼다. AI 안경 착용이 적발되면, 수능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해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무효 처리될 수 있고,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할 수도 있다.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하면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도 지침을 전달해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 참고하도록 했다. 전파탐지기 활용 방안도 검토됐지만, 올해 수능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규정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현장의 부담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I 안경을 일반 안경과 구분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다, 수험생의 항의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 기준도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일률적으로 의심할 경우 시력 교정이 필요한 응시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교사노조는 부정행위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감독관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교육부와 평가원,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수능 감독 업무 개선을 요구하는 전국 교사 서명운동에 나섰다. AI 기기 확인에 필요한 시간과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의심 상황에서의 판단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다. 아울러 정당한 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기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사노조도 AI 안경을 육안으로 식별하는 책임을 감독 교사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탐지 장비와 명확한 판별 기준, 감독 교사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감독관의 확인 항목만 늘리는 대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지침과 인력·장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이다. 감독관에게 기기 식별과 부정행위 판단을 맡기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 대응에 필요한 기준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교육 당국의 책임이 남아 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metro

## 절대평가 영어, 국어·수학보다 지역 격차 커 수능 당일 지하철 늘리고 시험장 차량 통제

상대평가 과목보다 상위권 늘었지만  
최고 지역,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  
수학 절대평가 땀 다른 양상 전망도

대학수학능력평가의 절대평가 전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수능 상위권의 지역 간 격차는 국어·수학보다 영어에서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5년 연속 1위를 지킨 가운데 대구가 밀려나고 경기와 세종이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지역별 입시 지형에도 변화가 포착됐다.

20일 종로학원은 2022~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3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내놔다. 2등급 이내 비율의 최고·최저 지역 간 격차는 5년 내내 영어가 국어·수학보다 컸다.

격차는 2022학년도 영어 16.0%포인트(p)·수학 11.0%p·국어 7.4%p 순이었다.

2023학년도에도 영어가 16.6%p로, 수학 10.7%p·국어 7.4%p를 웃돌았다. 2024학년도에는 영어 15.6%p, 수학 11.0%p, 국어 8.2%p였고, 2025학년도에는 각각 14.9%p, 10.2%p, 8.5%p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영어 격차가 13.8%p로 가장 컸으며, 수학 12.0%p, 국어 9.2%p가 뒤를 이었다.

영어는 2023학년도 이후 3년 연속 격차가 줄었지만, 국어는 2022학년도 7.4%p에서 지난해 9.2%p로 확대됐다. 수학은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최근 5년 중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절대평가인 영어는 상대평가 과목보다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 모두 상위권 학생 비율이 늘어나지만, 최고 지역이 늘어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배

우 어렵게 출제될 때는 오히려 지역 간 격차가 좁혀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이는 수능 평가 방식 개편 논의와도 맞물린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형 체제가 적용된다. 다만 국어와 수학의 절대평가 전환은 국가교육위원회 등이 아직 논의 중이다.

임 대표는 수학이 절대평가로 바뀔 경우 영어와는 다른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학습 부담이 높은 수학이 영어처럼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영어와는 상당히 다른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5년간 수학의 상위권 비율 격차가 국어보다 꾸준히 컸던 만큼, 평가 방식이 바뀌더라도 영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수정 기자

교육부 ‘수능 당일 지원 대책’ 발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도권 지하철 운행이 늘고 시험장 주변 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과 군사훈련을 조정하는 등 정부가 교통 혼잡과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20일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다음 달 1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실시한다. 응시 예정자는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줄었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의 시험 종료 시각

은 오후 9시 48분이다.

교통 혼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하철은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도 제한한다. 수능 당일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험생도 해당 지점에서 내려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소음 관리 대책도 내놔다.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 항공기·헬리콥터의 이착륙 시간을 조정한다. 같은 시간 동안포 사격과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도 중단한다. /김수정 기자

## 아태지역 교장·교감, 교육현장 변화·대응

교육부 ‘APEC 스쿨리더십 프로그램’

1인공지능(AI)이 학교 수업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장·교감들이 모여 교육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을 살핀다.

교육부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2026년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스쿨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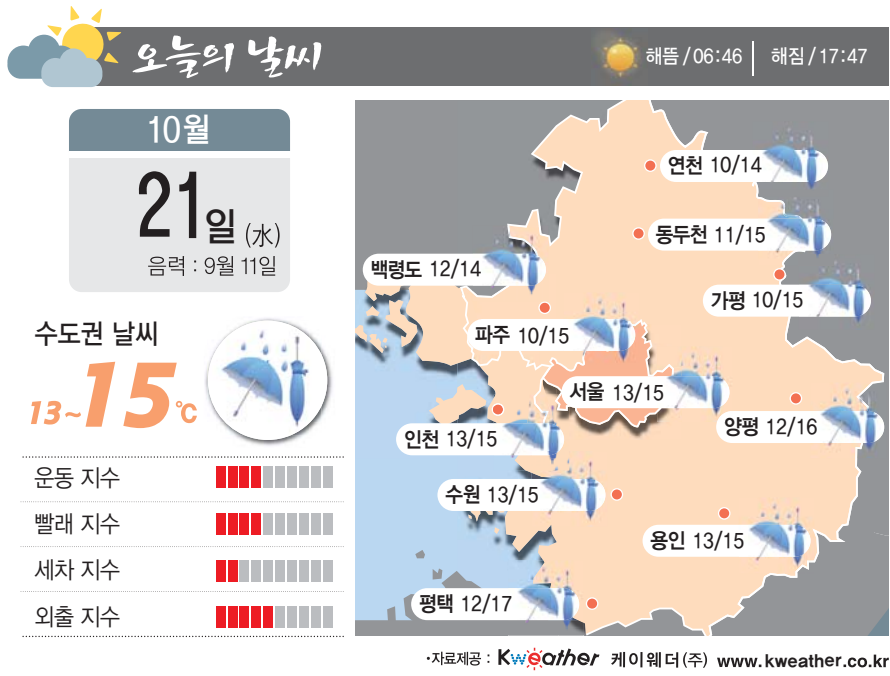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10개 회원 경제체의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등 52명(국내 28명·해외 24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AI) 시대, 세계와 연결된 학교를 이끄는 혁신적 리더십’을 주제로 ▲AI·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 ▲학교 운영자의 역할 ▲국가 간 교육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2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국제 미래 사회에서 학교 경영자가 맡을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이날 참가자들은 서울여자중학교와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에 방문해 교육 현장의 AI 활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22일에는 국내외 학교 관계자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오전에는 ‘A·I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교육혁신’을 주제로, 오후에는 ‘상호 연결 시대의 국제 교육협력’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날에는 분임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학교 간 교류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연수 이후인 11월에도 온라인 공동 워크숍을 열어 참가자 간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트럼프 “이란 군사력 꺾일…당장 철수 가능”

/사진 뉴시스

▲佛·伊·알바니아까지…유럽 전역 물가고 주택난으로 폭동의 불길

▲러 공습에 키이우 일부 단수…겨울 정전 길어지면 오수 범람 우려

▲노재현 주중대사 “한반도 정세 주시…中과 소통 강화”

▲강제동원 피해 유족, ‘사도광산 운영’ 日전범기업 손배소 2심도 승소

▲카타르 “이란전 에너지 여파 더 남았다”…호르무즈 불안 경고